

여야, 사흘째 청문회 격돌… 이진숙 청문 거센 공방

與 “여성 국립대총장 대단해”
野 “논문표절 의혹·자격 미달”
정성호 청문엔 검찰개혁 설전
김영훈 ‘방북 이력’ 놓고 충돌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사흘째인 16일에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 등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정책 검증이 아닌 인신공격과 ‘카더라식 의혹’ 캐물기에만 집중한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공교육 책임자로는 부적합하다고 몰아세웠다.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가 졸업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미국 사립고교·대학교 학비가 총 10억 여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후보자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민진 의원은 논문 표절 의혹을 추궁했다.

그는 “(제자 논문에) 본인이 1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연구 윤리에 맞지 않다”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저격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시간을 주면서 교육 정책 방향과 교육관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며 후보자를 격려했다.

이 후보자는 김 의원이 각종 논란과 관련해 허리 숙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실수가 있었던 점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교수 시절 작성한 다수 논문에 표절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표절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언론이 지적한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을 저도 한번 카피킬러로 돌려봤다. 어떻게 저런 표절물이 나올 수 있는지 돌려봤는데 10%를 겨우 넘었다.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겹칠 때마다 유사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해가면서 정확히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가 지적하듯 카피킬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 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 기여도를 따지고 이에 따라 제1저자를 결정한다”면서 “대학원생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교수가 주도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된다. 그것을 학생은 세부 과제로

진행하고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 (논문) 발표 순서”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2·3 불법 계엄 사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붙이면서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 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관계자들을 신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서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 등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집중 추궁하자,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박찬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

“李 파기환송 선거개입 조사”
‘지귀연 국조 요구서’도 제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사진)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사법 내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5월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외압 여부 및 적법성도 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 남용 의혹을 낱알이 밝혀진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의 ‘내란종식특별법’도 발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광주시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헌법 수호로 실현”

‘제77주년 제헌절’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77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둔 16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권력의 근원이 오직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의 근간”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헌정신은 그동안 숏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힘의 원

천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있었던 논란을 언급하며 “윤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회를 무력화했으며 불법 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이에 국민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6월 3일, 국민은 투표를 통해 윤 정부의 헌법 파괴를 단호히 심판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선택한 정권으로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히 존중받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현 기자

민주 보좌진 역대 회장단 “강선우, 즉각 사퇴하라”

“거짓 변명·감성팔이뿐” 비판
대통령실 “청문회 보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낙마 포화’가 쏟아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16일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명이 아닌 거짓 변명에 불과했고, 감성팔이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방어에만 급급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병기 “산재예방·농업대책·전력수급 민생대책 추진”

“출석거부尹, 후안무치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언제나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찾아온다”며 “경제 위기와 자연재해·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돌봄 사각지대를 재점검하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범여권에 속하는 일부 진보 야당과 여성단체에서 비토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대해서도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때 본인의 부족한 점에 여러 차례 사과했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관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도하게 부풀려져 보도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소명에 대한 여론 동향을 더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강 후보는 사실상 갑질 문제에 대해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역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새로운 적임자를 요청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킹·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여성단체 역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두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국민 여론을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낙마 사유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판단 시점이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난 이후일 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시점은 결정된 바 없고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만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느냐”라며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시라”며 “특검의 인지주의를 따르지 않는 교정 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